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주·전남 핵심사업은

AI 3대 강국 도약·통합공항 탄력

전남의대·RE100...정책공조 강화

광주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개 국정과제(564개 실천과제)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광주시 핵심 공약들이 담겼다. 국정 계획은 제21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민선 8기 동안 준비해 온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민보고대회에 제1호 국정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 도시 광주가 국가와 함께 광주 정신을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사업들이 반영됐다.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 집적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AI 산업 인프라와 AI 집적단지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국정과제 31번인 ‘미래모빌리티와 K-AI시터 실현’은 이재명 정부의 광주 지역공약인 대한민국의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미 ‘AI 국가 시범도시’를 이

민선 8기 성장 전략, 새 정부 지원 바탕으로 본격 추진
강기정 시장-지역 의원 협력...‘원팀’ 응집된 노력 결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정과제 반영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재명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반영시켰고, 시가 제안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운영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도 포함됐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현재 대통령실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달빛동맹 강화, 정치권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마련했고 대선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군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를 설득해 대통령실에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TF가 구성됐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리는 원팀의 전략적 판단과 응집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 정치권, 산업, 경제, 문화, 환경, 사회기반시설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광주발전 전략을 신속히 마련했다. 광주발전 전략은 대통령 탄핵 인용 후 4일 만에 수립,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해 공약 채택으로 이어졌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실·국정위·중앙부처·국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건의 활동을 위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에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다.

강기정 시장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책실장, AI수석 등 만나 광주가 가진 강점을 설명하며 인공지능(AI), 통합공항, 모빌리티 등 현안 건의를 했다.

또 국정위원장을 만나 광주발전 계획(프로젝트)의 국정과제 반영에 전력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남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도정 현안을 13일 발표했다. 도는 보건 의료, 산업전환, 첨단기술, SOC, 농수축산업, 문화관광 등 전방위 전략을 제시하며,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우선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립의과대학과 삼남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인 섬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확충도 병행해,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해양 산업단지를 재생 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로 전환한다. 여기에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과 탄소중립 대응을 병행한다.

AI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AI 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단, 글로벌 미니 신도시를 집적화하고, 국가 AI에너지 R&D 허브 및 인공지능 연구시설도 유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대형

철강·석화산단 대전환, 북극항로 항만 육성 등 전개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마련



김영록 지사가 13일 전남도 서울사무소에서 전남 핵심현안 국정과제 반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고흥에는 차세대 우주발사장인 ‘제2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구축하고, 광양만권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합정 유지·보수 전주기 혁신 거점(MRO), AI 자율운영 조선소, 친환경 전

기추진 선박 클러스터,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도 포함됐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는 철도

·도로망과 공항, 항만 등 대규모 SOC 구축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광역철도망으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화, 경전선 전철화를 본격 추진하며,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 초광역 도로망도 함께 정비한다.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하고,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과 무안 국제공항·여수공항 인프라 확충 등 공항권 개발도 병행한다.

농수축산업은 AI와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융복합 농수산지구와 첨단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K-해조류 기반 기후대응 플랫폼, 수산물 수출 클러스터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과 종합개발청 설립을 추진해 서남해안 해양·치유 관광벨트와 내륙 생태·역사문화권을 연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전남도의 핵심 정책과 정확히 맞닿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도민의 기대와 새 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국내항일·의병·학생운동 거점 재확인

전국 대비 높은 독립유공자·현충시설 보유...선양 정책 선도

전남도가 국내 항일·의병·학생운동의 중심 거점이었다는 사실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다시 확인됐다.

전남연구원이 13일 발간한 JN1 인포그래픽 ‘그들이 밝혀준 빛, 우리가 밝혀줄 빛’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독립유공자 수(1521명)와 현충시설 수(124개) 모두 전국 상위권이며, 독립운동 유형에서도 국내항일·의병·학생운동 비중이 평균을 웃돌았다.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미서훈자 발굴, 항일독립유산 지정 등 ‘선양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보훈부 명부 기준 전국 독립유공자

는 경북이 2522명으로 최다. 전남은 1521명으로 4위다. 유형별로 전국은 3·1운동이 가장 많지만, 전남은 국내항일운동(1910~1945)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나주(118명), 무안(108명), 영암(99명) 순으로 집계됐다.

훈격에서도 전남은 건국포장(188명)과 대통령표창(538명) 등 건국훈장과 훈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차원의 발굴·추진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충시설은 경북 164개, 전남 124개로 전남이 2위다. 도내에서는 보성(15개), 광양(12개), 곡성(9개) 순이며, 절반 이상이 3·1운동(32개)과 의병운동(30개)

관련이다. 거리와 학교, 생활공간을 무대로 한 ‘생활형 독립운동’의 흔적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의 강점은 ‘역사 재조명→제도화→교육·관광 연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다.

전남도 보건복지국 보훈선양팀은 광역 단위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과 서훈 신청을 직접 추진하고 있고, 전남독립운동사(2025~2027) 편찬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는 광복 80주년에 맞춰 도내 항일독립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며, 보존을 넘어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옛 방직공장 부지에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조성

고 이금주 회장, 투쟁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광주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조성, 고 이금주 회장(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장)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참전기념탑 건립 예정부지 지정 등 역사기록과 보존정신 선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대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해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역사문화공원에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을 조성한다. 시민역사관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모’ 고 이금주 회장이 남긴 기록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시민역사관이 들어서는 역사문화공원은 1930년대 전방·일신방직의 전신인 종연방직 전남공장의 제2보일러실



▲ 전일방 부지 토지이용계획

로 광주지역에 현존하는 유일의 일제강점기 산업시설이다. 일본 방직업체가 운영한 종연방직 전남공장은 방직기 3만5000추, 직기 1440대, 종업원 3000명의 국내 최대 규모였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장 시설 대부분 파괴됐으며, 현재 남은 시설물은 발전소와 보일러실 1·2, 고가수조 등 4개뿐이다.

광주시는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본정

부를 상대로 투쟁하며 남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이금주 회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동원자 명부, 일본정부에 제기한 소송 원본, 영상물 등 강제동원 피해실태와 일제의 만행을 수록한 국내의 자료 1670점을 남겼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활동사진과 영상,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1000인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273명의 소장도 포함돼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